

5·18, 항일의병 수정 시능만... 어디를 고쳤나

현장검토본 대비 중학 역사 310건·고교 한국사 450건

“유신체제 성과 강조에 위안부 기술 후퇴” 국회 맹비난

국정교과서 최종본 공개

“분석·검토할 필요조차 없는 교과서”,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는 교과서.”

교육부가 지난 31일 공개한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을 둘러본 지역 역사·교육 학계의 반응은 싸늘했다.

편향·왜곡·축소 서술에 대한 각계의 비판과 문제 제기에도 현장검토본과 크게 달라진 것 없는 내용에 대한 질은 한탄도 쏟아졌다.

◇760건 고쳤더니... “고치기 고쳤나” =교육부는 이날 현장검토본 발표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받은 의견 중 중학교 역사는 310건, 고교 한국사는 450건 등 모두 760건을 최종본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학생독립운동 등 주요 내용의 경우 수정 흔적을 찾기 어렵다.

신봉수 빛고을역사교사모임 대표 등은 현장검토본 공개 당시 광주학생항일운동에 참여한 학교만 320개에 이르는데도, ‘전국의 194개 학교에서 5만4000여명의 학생이 참가’ 식으로 기술한 점을 지적했었다. 하지만 최종본에도 이같은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내 뿐 아니라 일본과 만주로 확산되기도 했던 최대 민족운동임에도 국내로만 한정시켰다는 지적도 최종본에 담기지 못했다. 전국에서 가장 활발했음에도 검정

교과서와 달리 단 몇 줄로 정리하는 등의 미를 크게 축소했다는 호남 의병 활동 기록도 늘어나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 미화’ 부분은 바꾸지 않고 남겨뒀다. 현장검토본 공개 당시 현대사 영역에서 박정희 관련 서술(18년)은 크게 늘리는 반면, 6월 항쟁 이후 30년 세월은 4쪽 안팎에 그친 점이 대비되면서 균평의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당시 현장검토본을 분석한 이신철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공동위원장은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박정희 교과서”라고 썼었다.

최종본은 그러나 261~267쪽까지 박정희 정부의 안보와 경제성장을 강조한 현장검토본(고교) 분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암울했던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 대신, 경제 성과를 강조하는데 무게를 둔 흔적도 그대로 남았다. “제1,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 수출은 연평균 36%로 급격히 늘어났다”, “정부가 수출 진흥정책을 강력히 펼친 결과, 수출이 매년 40%씩 증가하여 수출 1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였다” 등의 서술이 대표적이다.

◇수정 시능만 했다=이영 교육부 차관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 과 일본군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명시해 ‘위안부’ 관련 서술 강화 ▲제주 4·3사건의 구체적 서술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

개됐다’는 새마을 운동의 한계점 등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제주 4·3 사건의 경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국회의당 의원들은 그러나 “본문은 그대로 둔 채 각주만 늘렸다”고 비판했다.

4·3희생자유족회 측도 “유족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을 철저히 무시한 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엉터리 교과서를 강제 주입하려는 치졸한 작태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위안부 서술도 비슷하다. ‘위안부’ 관련 서술을 강화했다는 게 교육부 시각이다.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2에서 ‘수요 시위 1000회를 기념해 평화의 소녀상이 건

립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이송에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일본군 ‘위안부’의 모집에 관현이 직접 가담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를 집어넣거나 고교 ‘한국사’에 ‘전쟁에 패배하여도 망가는 일본군에 집단 살해당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지만 국회는 ‘위안부’ 피해자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최종본 230쪽, 현장검토본 228쪽)을 빼는 하 하면, ‘강제동원된 일본군 위안부’라는 사진 설명을 ‘연합군에 발견된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기술은 더 후퇴됐다”고 오히려 비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명절 뒤끝 지난 31일 광주시 서구 동천동의 한 어린이공원 앞길에서 서구청 공무원들이 설 연휴기간 배출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계엄군 잔인한 진압과정 평이하게

5월단체·지역민 의견도 아예 무시

5·18 서술 어떻게 바뀌었나

5·18민주화운동의 경우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당시 “기존 검정교과서(유미레엔)에 견줘 내용이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최종본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개의 단락으로 나눠 2페이지 분량으로 다룬 게 전부로, ‘민주수호 범시민 결기대회’라는 제목의 사진을 추가한 정도다.

검정교과서는 5·18을 노태우 정태준의 노랫말과 ‘5·18 꼬마 상주’ 조천호씨 사진, 계엄군의 진압 장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판결문 등을 게재하며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토대가 됐다는 의미를 서술해 국정교과서와의 차이가 확연하다.

또 검정교과서가 ‘계엄군은 탱크와 헬기까지 동원하여 시민군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전남 도청을 장악하였다.(5.27)’라고 적은 것과 달리,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계엄군은 5월 27일 대규모 군대를 투입하여

전남 도청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죽거나 다쳤다’라는 ‘평범한’ 서술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12·12 군사반란’에 대한 명칭도 ‘12·12 사태’를 그대로 유지했다. ‘수습대책위원회와 계엄군 사이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계엄군이 군대를 투입하여 일부 시민들은 전남 도청을 중심으로 항쟁을 이어갔다. 계엄군은 5월 27일 대규모 군대를 투입하여 전남도청을 장악하였다’는 부분도 5월 단체 등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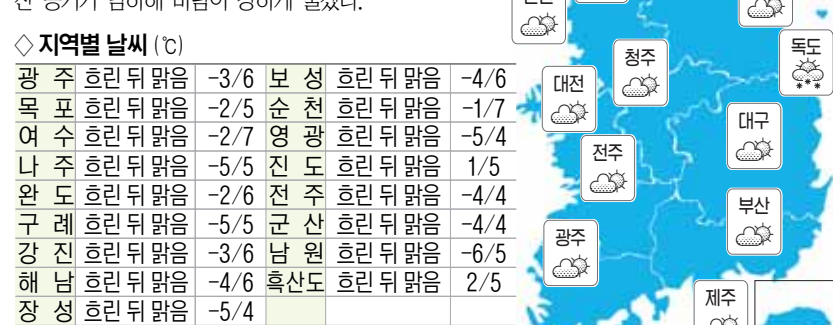
5월 단체 등은 당시 “마치 평화적인 협상이 이뤄졌고 이런 협상이 결렬되어 불가피하게 계엄군이 진압했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한 뒤 “끝까지 상황을 해결하려는 광주시민들을 총과 탱크로 살상하고 강제진압한 쪽은 계엄군”이라며 왜곡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2 해질 18:01
달출 10:03 달짐 22:24

감기 조심하세요
찬 공기가 남해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후린 뒤 맑음 -3/6	보성	후린 뒤 맑음 -4/6
목포	후린 뒤 맑음 -2/5	순천	후린 뒤 맑음 -1/7
여수	후린 뒤 맑음 -2/7	영광	후린 뒤 맑음 -5/4
나주	후린 뒤 맑음 -5/5	진도	후린 뒤 맑음 1/5
완도	후린 뒤 맑음 -2/6	진주	후린 뒤 맑음 -4/4
구례	후린 뒤 맑음 -5/5	군산	후린 뒤 맑음 -4/4
강진	후린 뒤 맑음 -3/6	남원	후린 뒤 맑음 -6/5
해남	후린 뒤 맑음 -4/6	축산도	후린 뒤 맑음 2/5
장성	후린 뒤 맑음 -5/4		

◇바다 날씨

	오전	파고(m)	오후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2.0	북서~북	1.0~2.5
남해 앞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2.0~3.0
남부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1.0
남부 서해 앞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남부 서해 앞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2.0~3.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05	04:53
	22:33	17:20
여수	05:32	12:00
	18:06	---

◇주간 날씨

2(목)	3(금)	4(토)	5(일)	6(월)	7(화)	8(수)
-6/3	-3/7	-2/8	2/7	-2/8	-3/8	-3/7

법원 “무죄 전남개발공사 전 간부 징계 위법”

남양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역 발주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전남개발공사 전 사업본부장에 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전남개발공사 전 사업본부장 A(현 여수시청 국장)씨가 전남도청을 상대로 낸 징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전남도는 2014년 12월 “오룡지구 택지개발 관련,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다”며 당시 전남개발공사 사업본부장으로 있던 A씨와 전 사장 B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과 업체 간 뇌물수수 등 ‘부적절한 거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들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

두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이 났는데도 전남도는 지난 해 7월 “오룡지구 택지개발 관련, 기술 자평기위원회를 부적절하게 구성·운영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 등이 감사에서 적발됐다”며 A씨에게 징계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법 “학과 폐지 이유 교수 해임 안돼”

사립 대학에서 학과가 없어져도 소속 교수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초당대학교 이모 교수 등 3명이 학교 재단 이들을 면직하겠다고 통보했다. 교수들은 초당학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의 복직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초당대 부교수·정교수이던 이들이 속 한 디지털 경영학과 등은 2009년 학교 경영사 문제해결이 결정됐다. 학교 측은 폐과가 완료되는 시점인 2013년 2월부터 이들을 면직하겠다고 통보했다. 교수들은 학문 성적이 우수한 다른 과로 자신을 배치해달라고 했지만, 학교 측은 면직을 강행했고 이들은 2013년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www.aroma-life.co.kr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이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